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조경완



도대체 누구 짝어야 하나. 날씨는 꼬박꼬박 12월 대선날로 다가오는데 입지않은 호남 민심은 부유(浮遊)한다. 부르건대 '범 여권' 진영에서 지금쯤 힘을 얻은 후보가 한명 두드러져야 어딘가 이명박 후보와 대결이 벌어질 텐데, 여지껏 돌로 셋으로 갈라졌으니 언제 싸울지라도 싸움이 벌어질까 싶다.

두고 볼 일로써 물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표들의 정치적 비중과 밀도는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똑 떨어질 것 같다. 갑동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10년 전 IMF 위기속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에게 표를

도대체 누구 짝어야 하나

찍고 나올 때의 떨림, 5년 전 '각본없는 주말드라마' 새천년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지켜보며 평화세력의 후계자 노무현을 사

실상 범여권은 왜 이명박을 찍으면 안되고 자기네를 찍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호남유권자들을 납득시킨 적이 없다. 여권 예비후보

들은 이명박이 개발독재시대 인물이라고 비난하는데 요즘같은 혼란속에선 개발독재를

되려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명박이 도

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무능한 대통령보

다는 땅 숨겨둔 대통령이 낫다는 게 이미 드

러난 민심이다. 이명박이 대통령되면 남북

감동·열정이 없는 대선

현대 한국 정치에서 늘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는 호남표의 향방은 어떨까.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되면 역시 물표를 줄까?

계가 어려워진다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전쟁 나라 믿는 사람은 없다. 관이 이렇게 왜버린 건 현 집권세력의 자업자득이다. 정권재창출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당을 쪼개 나간건 정당개혁의 시도였다 치자. 남북화해세력인줄 알았는데 김정일에게 뒷돈을 줬다며 특검을 하고, 반전 평화세력인줄 알았는데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노동자 농민의 수호자인줄 알았는데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386 전횡은 꼬리를 물고있고 그나마 도덕적이라는 간판마저 슬그머니 내려야 할 처

식이라는 전두환은 사상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충격을 받은 좌파 경제학자 안병직이 우파로 전향할 정도였다. 문민정부 임을 앞세우던 김영삼은 역설적으로 유산계급이 고통받는 실패자를 단행했다. 김대중은 사회주의경제학이라 비난받던 자신의 '대중경제론'과는 정반대의 시장 경제를 지상과제로 삼았다.

표 달라 할 구실 있다

외산에 좌파정권으로 소개되던 현정권은 반(反)시장적이거나 아니면 반(半)시장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던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과 효율을 말하기 시작했다. 시장으로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주특기가 아닌가. 표를 달라고 할 구실이 더 없어진다.

실정(失政)을 하면 실권(失權)하는 게 맞다. 그러려면 대체세력이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도 현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계호 남의 고인이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는 자유당시대 구호가 아직 유효할 줄이야..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고 평해진다. 그러나 지금 갈아선 호남표는 여러 갈래로 나뉠 것 같다.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나부터 주인공이냐 관련자가 되어 지켜볼 밖에.

(편집부국장) kycho@kwangju.co.kr

시설

법정 계량단위 꾸준한 계도로 뿌리 내려야

'평'이나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정도량형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와 홍보 부족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되지 못한 채 혼선이 극심하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전면 금지하는 개정 계량법 시행과 함께 비법정계량단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비법정단위 사용에 따른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엇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정계량단위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법정계량단위 정착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의 통과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 십년 동안 써온 비법정단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국민들의 적응은 불편과 혼선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우리 후손

이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55.7%가 법정계량단위에 대해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54.5%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정단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이뤄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홍보와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협이나 지자체의 홍보 및 계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법정계량 단위 정착을 주도해야 할 정부

가 능하게 응자 기준 등에 아직까지 전통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할 뿐 법정단위 정착은 요원하다.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세계적 추세라면 이제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정부는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지만 보다 국민들의 머리에 와 닿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꾸준한 홍보와 계도로 미터법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엑스포 여수 유치 유럽공약이 관건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4일 유럽연합(EU)을 집중 공략했다. 김재철 위원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EU기업과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수가 모로코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EU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36개국이나 되는 표밭이다. 오는 11월 27일 개최지 선정투표에서 EU의 선택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유치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유럽연합 국가의 표심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에서 여수가 앞서 있다지만 모로코와 폴란드가 무시할 수 없다. 모로코 탕헤르는 아프리카·이슬람권 최초의 세계박람회 개최지라는 명분과 함께 세계적 휴양지 및 유럽과의 접근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폴란드 브로츠

와프도 바덴사 전 대통령이 앞장서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2차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여수는 모로코 탕헤르와 결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폴란드 지지성향으로 분석되는 유럽연합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유럽연합은 경제계 의견을 개회지 결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 공약은 쉽지 않다.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국가와 역사적 연대가 단단하고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치위원회가 유럽연합 경제계를 상대로 유치전에 나선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는 개최 능력보다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우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하되 특별·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고

최희동



대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이었다. 참여정부의 실정과 강력한 여권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한나라당 경선은 마치 후보지명이 곧 대통령 당선처럼 여겨져 이전투구의 치열한 싸움이 되었다.

당원투표에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겨 힘겹게 승리를 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축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깊은 우려를 언론들은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경선을 통해 제기된 많은 의혹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비서올대 출신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CEO까지 오른 전력을 갖지만, 종사했던 업종의 차이처럼 지향점과 살아온 과정이 대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세계화를 이해하는 경제적 마인드와 중소기업 중심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장담론 그리고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있어 맞춤후보론에 어울린다는 여론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고건 전 총리 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처럼 현실정치에 벅어 가로막혀 중도에서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우려는 국민들이 문국현이라

맞춤 후보론

불러일으킬 강력한 여권후보가 등장한다면 지금의 지지 세력이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보기에 그렇다.

이렇다보니 여권후보들 사이에 '맞춤 후보'라는 새 정치용어가 생겼다. 이름도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여 이미 결정된 한나라당 후보와 견주며 자신만이 필승카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와 지지율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지가 국민들의 관심거리다.

이런 와중에 문국현 대안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경제라는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맞설 진짜 맞춤후보라는 것이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가혹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건설·개발중심의 가짜경제'와 성장·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중소기업중심의 진짜경제'의 대결'이라며 이명박 후보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문국현 대안론은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될 경우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 정치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현실정치와 부딪치는 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CEO로서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매출을 비약적으로 신장시켰듯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정치마케팅 능력을 기대해 본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사무총장 ·2006년 6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 안전운전 더 확실하게

초등학생의 교통사고는 개학기 등·하교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며, 사망자의 경우도 자연령체인 1~2학년생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의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주·정차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아 속도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과속을 일삼고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주변환경에 대한 탐색능력 부족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우 다른 주변 상황에 주의분산 능력이 떨어지고,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로 믿고,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동조행동을 나타내므로 운전자들이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충동

최익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을 도시민들의 영농 체험 및 주말 휴식처로 활성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다.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비농업인(도시민)도 세대별로 1천㎡(302평) 미만의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33㎡(10평) 이하의 주말농장 주택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도시민 농촌 투자 걸림돌 없애야

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도 도입돼 주택 건설이나 구입을 통한 서울시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대해 660㎡(200평), 건평 148㎡(45평) 이내로 땅값과 건물 합계액이 취득 당시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종전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같이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농촌 참여 확대를 위해 농지법과 건축법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도시민들이 농촌주택 구입에 실패하는 이유를 무엇인가? 다음은 1가구 2주택 보유에 따른 걸림돌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 요소가 적은 농촌 읍·면 지역의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시 '1주택' 개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도시민이 도시에 주택이 없더라도 농촌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얘기다.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1가구 2주택에 따른 각종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 도시민들의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 투자 및 이주 촉진이라는 근본 취지와도 어긋난다.

올해 세계 개관안에 양도세 면제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도 전일마을 평균 분양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

실제 농민부가 실시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참여한 22개 전원마을을 2천959세대의 평균 분양가는 1억8천200만원이었으며 최고는 3억2천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원마을을 분양받은 대

부분의 가구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민들이 부담없는 농촌주택 구입으로 농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정부는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소유할 경우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함은 물론 그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도 과감히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주말체험이나 영농을 위한 농지에 짓는 33㎡ 미만의 주택은 아예 주택 개념이 아닌 농업 부속시설로 인정해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주택 규모도 대지 660㎡, 건평 148㎡ 이내로 여전히 제한해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정 예정인 양도세 면세기준 금액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공제보험팀장)

뺑소니 사고 적극 신고해야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씩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교통사고야기도주(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가족이 사고에 대한 작은 제보라고 얻기 위해 신고에 대한 보상을 내걸고 신고를 유도하지만 좀처럼 제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고 후 단순히 겁에 질려 순간적으로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의 유류품 등을 수거해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어 더욱

수사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초기에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를 저버리고 도주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광개진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사고를 목격하였음에도 자신의 일과는 무관하다거나 신고를 하면 귀찮다는 의식, 자신이 목격한 것이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가법계 여지가 많지 않다. ▲기회복·나주경찰서

無等鼓

거짓말로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경제인들에서부터 작은 거짓말로 주위를 곤혹스럽게 하는 도적들까지..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다.

독일의 역사학자 볼프강 라인하르트가 말했듯 거짓말을 죄악시하기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지닌 잠재적 가치가 너무 크다. 아침에 기분이 별로인데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해야 하고 상사가 자신에게 끼친 손실에 속이 뒤집히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악의적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과 구별, 색깔까지 넣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명명했으리라.

정신의학자들은 이런 거짓말의 심리를 우선 뿌리깊은 열등감과 자만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실인 양 말해 버린다는 것이다. 또 도덕에 대한 부도의 이중적 태도가 아이들의 잠재의식을 거짓말에 노출되도록 했다고도 진단한다. 그런가

하면 상류층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사기도 무시할 수 없다. 미워하면서도 싫다는 말처럼 욕하면서도 어느 틈에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가.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거짓의 골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인지 오늘날 사회가 거짓말에 관대해졌다. 실제로 요즘 거짓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에티켓쯤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 경제인에게 있는 것 같다. 이들의 거짓말을 자주 듣다 보니,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긴 꼴이 된 셈이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까지 면죄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정에서 가짜 학력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씨 문제가 사건 발생 두달이 넘도록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차제에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새빨간 거짓말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김우성 경제부장 wskim@

거짓말 심리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